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지역경제과)

의안번호	제138호
제 출 자	양순임 의원 외 14명 (2023. 5 19.)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 동물복지에 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및 요구 수준을 조례명 및 조문에 반영하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022. 4. 26.) 및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반려동물의 정의를 법에 따른 정의로 변경(안 제2조제2호)
- 다. 동물복지시행계획에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제1호)
- 라. 저소득층 반려동물 동물복지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7조 제3항 신설)
- 마.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법 개정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지역경제과

라. 입법예고 : 2023. 5. 19. ~ 2023. 5. 24.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및 요구 수준을 조례명 및 조문에 반영하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022. 4. 26.) 및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명의 변경
 - 동물을 일방적인 보호대상이 아닌 “반려”라는 동반자적 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사항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개정 2022. 4. 26. 시행 2023. 4. 27.)
 - 동물보호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

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였음.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 제2조제2호 : 정의를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로 개정
- 제2조제4호 : 법 제2조제2호 → 법 제2조제8호
- 제2조제7호 : 법 제15조 → 법 제35조, 법 제36조
- 제4조제2항제1호 : 확산 → 동물복지 향상
- 제8조제1항 : 법 제15조제1항 → 법 제35조,
법 제15조제4항 → 법 제36조
- 제9조제2항 : 법 제15조제7항 → 법 제36조제4항
- 제10조제1항 : 법 제14조 → 법 제34조
- 제10조제4항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제11조제3항 : 법 제21조 또는 제22조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제12조제1항 : 법 제14조제1항제3호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제12조제2항 : 법 제21조 → 법 제45조
- 제12조제3항 : 법 제20조 → 법 제43조,
법 제21조 또는 제22조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제14조제1항 : 법 제39조 → 법 제86조
법 제32조제1항 → 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 제14조제3항 : 법 제45조 → 법 제94조
- 제18조제1항 : 법 제41조 → 법 제90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명예동물보호관

- 저소득층 반려동물 동물복지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안 제17조 제3항) :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동물을 일방적인 보호대상이 아닌 “반려”라는 동반자적 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함.